

[오피니언]

월/요/광/장

하동만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기시해 오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생명공학의 꽃으로 불리져 온 줄기세포 연구가 미국에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전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세포 탄생을 세계 학계에 보고하면서 생명공학에 선두주자로서의 꿈이 영광으로, 불과 1년여만에 그 연구가 조작되었다는 끔직한 난인 아래 꿈을 접어야만 했다.

필자는 특허청장 재직시절 황우석박사가 국제특허만 제출해놓고 국내특허는 출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내 줄기세포심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그를 설득해 국내특허출원을 하게 된 기억이 새롭다. 당시 특허청 전문심사관들은 황박사의 연구성과에 대해 몹시 큰 기대와 설레임을 보았다. 만약 황박사의 연구성과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세계최초의 발명이었다면 원천기술 보유국으로서 우리는 미개척 줄기세포산업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선두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황우석박사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관

련 학계의 결론에 접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일을”이라는 자학적 냉소속에 줄기세포연구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줄기세포기술개발이 갖는 너무나 큰 경제적 중요성과 질

광주·전남도 줄기세포연구 참여를

병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인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황박사의 연구가 줄기세포기술개발에 일말의 단초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노하우를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성과되어야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물복제기술은 사상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전문가들이 지난 4년간을 허비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줄기세포기술개발이 이처럼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 기술이 미래 성장산업

으로써 가장 유망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국민, 우리 지역민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손기술이 줄기세포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줄기세포 등 관련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동물복제나 줄기세포 연구팀을 초청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자원 활용과 함께 생명공학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미래 우리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신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진돗개로 유명한 진도에 세계 각국의 명예들이 자연 상태에서 자랄 수 있

는 세계최대 규모의 ‘개 사파리’를 조성하여 그 중앙에 세계 애견가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의 동물복제 전문팀이 운영하는 애견복제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진도는 세계 제1의 동물복제의 메카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세계 동물애호가들은 이것이 찾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세계최초의 기술을 활용하는 중심센터가 된다면 세계첨단 건강·의료의 하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최고의 장수미술인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알릴 수

있는 기기도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기술을 결합시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학계·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투자유치의 핵심은 인적자원, 즉 우리가 해당분야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나서게 됨으로써 중국, 일본,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들도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섰다가 뒤로 물러선 경험이 있다. 만약 지난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시행착오나 결점이 적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황우석박사팀의 예에서 보듯 이 탁월한 리더의 지도력과 연구진의 자기희생적 철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연구에 수많은 연구팀이 생겨나고 또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고 기존의 연구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다양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3파전된 ‘U대회’, 광주유치 성공하려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경쟁이 광주를 비롯한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본부가 U대회 유치 도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들 3개 도시가 최종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5월23일 개최지 결정까지 약 2개월 간 유치전이 본격화된다.

2015 U대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또 하나의 프로젝트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도시브랜드 가치평가에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글로벌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서울이 국제도시로 탈바꿈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부터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맨다는 각오로 유치전에 돌입해야 한다. 광주시민들도 경쟁도시를 능가하는 유치 열기를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고무된 광주시는 높은 인지도와 네트워크, 완비된 경기장 시설 등을 내

북한은 개성공단 무조건 정상화해야

북한이 개성공단의 입·출경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북한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인 ‘기리졸브’를 ‘북침용’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지난 9일에 이어 13일부터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북 육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행 차단은 한반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볼모로 삼았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제정된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에서 ▲(남측) 투자자의 권리와 이의 보호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 ▲투자자의 재산국유화 배제 등을 명문화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활동 및 재산 보장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 차단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물상식한 행위로,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불이익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하되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국 주요 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대학입시 개혁의 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 4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 선발 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방식에는 기회균형 선발과 놓어온 특별전형 등이 포함돼 전남지역 학생들의 주요 대학 진학 기회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이다. 학생 여부가 사정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도입 초기여서 노력이나 전

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의 성과와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는 명분 아래 사설상 대학이 원하는 학생만을 골라 뽑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성이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했던 이유다.

최근 카이스트(KAIST)를 필두로 전

경후식 사회 1부장 who@kwangju.co.kr

인터넷 중고차 판매상 ‘미끼 상품’ 꼼수 사기 주의

나라는 해방 후 미국의 영향아래 정치, 경제, 문화 모두가 미국을 따라 가게 되니 법제도와 사회 현실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됐다. 미국 영화를 수 없이 본 국민들은 로스쿨과 배심원제도로 상징되는 미국사법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믿고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再修)는 기본이다. 삼수(三修), 사수(四修)도 불사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명문대에 갈 수 있다면 성공이다. 편입학도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좀 더 나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다. 학문의 심화, 학습영역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대부분 학력세팅이란 구조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중위권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이동한다. 지역(지방)대학들은 인서울로 진입하는 것에 목표다. 원인은 간단하다. 좋은 학벌이 더 많은 기회와 사회적 성공을 가져

학벌주의에 대한 또 다른 해법

다 출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배경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훌륭과 같은 ‘후광(後光)효과’다. 반면,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경우는 ‘낙인효과’에 시달려야 한다.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적(國籍)은 변해도 학적(學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한다. 후광효과는 역으로 비교되는 학교를 나온 학생에게는 좋은 학교로 인식된다. ‘엄친아(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딸(엄마 친구의 딸)’ 비교의식도 이런 경우다. “엄마 친구의 아들은 좋은 학교에 갔는데 너는?” “엄마 친구의 딸은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촌리그 YES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에 갔는데 너는?” 바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선택지는 여려 가지다. 모든 대학을 명문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대학을 명문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 해법이다.

살인적인 입시경쟁, 사교육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 시킬 수 있다.

그럼 몇 개의 학교가 필요한가? 10개? 20개? 통상 상위 10% 까지의 학생들이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여 개 정도의 학교가 유통되어야 한다. 대입 수험생들이 60만명이면 약 6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학교서열은 별 의미가 없다. 예컨대 경영명문, 미술명문, 여성학 명문 등 특정 분야의 명문이면 족하다. 이런 점에서 SKY를 더욱 소수에 해석하는 방식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유 역시 간단하다. 소수의 특정 학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입시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시에도 ‘베이루트 법칙’이 작용하는 템다. 특정대학들의 과점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도 커진다. 다양한 명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다.

〈교육평론가〉

도시민에 ‘낙농 체험’ 제공하는 ‘밀크 스쿨’ 열었으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주는 우유를 기피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과자류나 초콜릿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입맛 탓이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방학 때마다 우유급식 우수학교를 지정해 해당 학교 아이들을 초청, 현장학습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강원도 평창 등지의 목장에는 소와 양떼 등을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아예 관광지로 개발해서 전국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버스로 데워갈 정도다.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 내 규모가 좀 큰 목

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아이들은 우유를 생산하는 젊은 농장을 견학하면서 생생한 자연 환경 교육은 물론 우리 농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낙농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된다면 집과 학교로 돌아가 우리 우유와 낙농에 대해 느낀 그대로를 전해 줄 것이다.

초등학생,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찾아갈 수 있는 낙농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보자. ▲김점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皓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총보국 2200-541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0005)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34 문화체육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2-651)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222-9500)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7-9500)	(F A X 222-9335)
(F A X 222-4267)	본사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